



## 누더기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들을 빛의 구렁렁이에 방치하는 것이다

5월 25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대출을 해 줄 테니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사라는 것이다. 또 경매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으면 LH가 집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거주하게 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재산에 빚까지 내서 마련한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은 정부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요구했고, 그게 안 되면 '최우선 변제금 제도(소액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2500만~5500만 원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는 제도)라도 확대 시행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대신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로 10년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들더러 추가로 빚을 내라는 뜻이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기존의 전세 담보 대출을 고스란히 갚아야 한다. 특별법은 이 빚을 20년간 분할 상환하게 해 주겠다는 것뿐이다. 사기꾼들이 떼먹은 돈을 평생 갚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카톡방에는 이 법안을 성토했다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특별법 진짜 화나네요. 누구 위한 특별법이지? 우리한테 또 빚을 지라는 게 어이가 없네요." (전주의 한 피해자)

"앞으로 남은 건 빚뿐이라 결혼도 안 하고 빚만 갚으면서 평생을 살아야겠네요. 빚만 남은 인생. 정부는 출산율 운운하지 마시길."(경남의 한 피해자)



이런 알량한 혜택조차 정부는 엄격하게 선별해서 주겠다고 한다. 국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범위가 일부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동전세 피해자들은 제외한다는 골간은 유지됐다.

### 우선순위

정부는 "혈세 낭비", '사기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정부는 부도 위기 건설사들의 채권을 매입해 주는 데는 수조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 등 대기업들에게는 5년간 무려 13조 원에 달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문제는 기업과 부자만 위하는 정부의 우선순위인 것이다.

한편,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민주당과 정의당에도 정부의 생색내기 추가 대출에 합의하지 말"라고 촉구했지만, 야당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을 위한 듯 행세해 왔지만 사실 애초부터 매우 부족한 대책을 내놨었다. 전세 보증금에서 선순위 채권은 빼고 지급하는 안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다. 민주당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세금 지원을 많이 할 수 없다고 전제한 것이다.

민주당은 집권 시기 동안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시장 타협적인 부동산 정책을 쓰며 전세 사기 사태를 키운 책임이 있는데도 말이다.

정의당은 처음에 전세보증금의 50퍼센트 이상은 보전해 주자는 안을 냈다. 그러나 국민의힘·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후퇴하며 누더기 법안 통과에 결국 일조하고 말았다. 그래서 심상정의

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자 애를 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민주당과의 합의 처리에 집중하다 보니 특별법으로 혜택을 보는 피해자들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서 투쟁의 동력이 더욱 훼손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최근 안타깝게도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명이 또 자살을 택했다.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심해지고 있어 전세 사기·강동전세 문제는 더욱 확대될 공산이 있다.

누더기 특별법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이 커져야 한다.

###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는

젤렌스키에게 직접적 군사지원 약속한 윤석열, 중국을 둘러싸고 긴장을 드러난 67 정상회의, 김남국 코인 논란, 마르크스주의와 평화주의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5월 23일 국정원과 경찰이 전교조 강원지부장과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창원 간첩단' 하부 조직에 연루됐다고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경찰은 항의하는 전교조 간부들과 충돌을 벌이면서 문을 부수고 사무실에 진입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자택과 숙소, 개인 차량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무장한 기동대 버스와 경찰 20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당일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전교조 강원지부, 정의당·진보당 강원도당 등 30여 명이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밀리에 활동하는 간첩을 잡겠다면서 공개적인 압수수색으로 충돌을 벌이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패턴이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노림수는 뻔하다. 언론의 마구잡이 간첩단 물의를 부추겨 노동운동과 좌파 세력을 위축·분열시키려는 것이다.

이번에 타깃이 된 두 활동가는 대학생 시절에 학생운동에 참여한 뒤 지금까지 노동운동과 좌파 운동에 헌신해 왔다.

국정원은 이 활동가들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간첩 의심 인물과 접촉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격의 대상이 친북 활동가라 해서 그 공격이 친북 사상만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공격은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사상·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인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다.

즉, 이들에 대한 공격은 민주노총과 진보당을 포함하는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친북 사상에 동의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윤석열과 보안 기구의 공격에 반대해 그들을 방어해야 한다. 그래야 운동이 위축되지 않고 단결할 수 있다.

행위 사상이 다르다고 방어를 꺼리면 그것은 사상의 자유를 지지하는 태도가 아니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지켜 낼 수 있을 때 무엇이 더 운동에 도움이 되는 사상인지도 토론될 수 있다.

특히, 간첩 의심 인물과 접촉해 북한 국가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방어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직 이것의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설령 그런 접촉이 있었다 해도, 관련 친북 활동가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일관되게 실천에 옮기려 했다면 그

행위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이 말처럼 윤석열 반대 투쟁의 불씨를 키울 수 있도록 노동운동은 단호하게 보안법 희생자들을 방어하며 분열 책략에 맞서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5월 31일(수) 오후 8시  
발제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국제연락간사

참가신청 bit.ly/0531-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